**안보/외교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홍준표 | 심상정 | 유승민 |
| 핵 | 전술핵 재배치 | 비핵화 원칙 유지 | 미 핵전력을 한미 공동 자산 운영 추진 |
| 사드 | 사드 배치 및 유지 | 사드 배치 반대 | 사드 추가 도입 |
| 방어 체계 | 킬체인, 미사일 방어 체계 등 전력 강화 | 모든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 | 한국형 상쇄전략 채택 |
| 군체계 | 군 4군체제 개편 |  |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1~3년 연장, 안보희생지역 보상 확대 |
| 개성공단 | 재개 반대 | 재개 | 재개 반대 |
| 대북 전략 | 전방위적 대북 제재, 압박 추진 | 북한과 대화 시도, 지역 차원  다자안보협력 추진, 금강산 관광 재추진,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, 대북 쌀 지원 재가동 | 첨단무기 등으로 대북 제재 강화 |
| 대미 전략 |  | 전시작전통제권 회수, SOFA 개정 |  |
| 대일 전략 |  | 12.28 위안부 합의 재협의 추진 |  |
| 군 문제 |  | 의사 모병제 도입, 아웃소싱 분야 민간 이관 추진, 사병 급여 최저임금의 40% 이상으로 인상. 여군 비율 상향 조정 | 군복무 병사들에게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 법제화, 장병 의료지원체계 대폭 개선, 군과 사회와의 연계 강화 |

**경제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홍준표 | 심상정 | 유승민 |
| 중소기업 | 강소기업 육성에 투자 | 재벌중심의 수직적 기업결합 위주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로 전환 추진 | ‘중소기업청’을 ‘창업중소기업부’로 승격, 대기업-중소기업간 입금 및 복지 격차 축소,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확대 |
|  |  | 열정 페이 등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강요 엄중 처벌 |  |
| 비정규직 | 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지원금 및 조세감면 확대 | 기간제, 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,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,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금지 | 상시, 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 제한,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총량 설정 |
|  | 강성 귀족노조 타파 |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,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법제화 |  |
|  | 기업 규제 대폭 축소 | 순환출자 해소,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강화 | 총수 일가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,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사면, 복권 금지 |
|  |  | 복지에만 사용 목적인 사회복지세 신설 |  |
|  |  |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%로 인하 |  |
|  |  |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지침 폐기 |  |
| 최저임금 |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|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|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%씩 인상하여 20년에 1만원 도달 |
|  |  |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|  |
| 산업현장 관련 |  | 근로감독관 2천명으로 증원 | 사업장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 원청 사업주에 책임 부과, 처벌 수준 강화 |
| 근로시간 및 퇴근법 |  | 법정근로시간 감독 강화, 연 1,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, 주 35시간 노동제 추진, 5시 퇴근법 도입 | 퇴근 후 업무지시 제한, 근로일 사이에 ‘최소휴식시간’ 보장 |
| 육아 |  | 출산전후휴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,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,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, | 육아휴직 최장 3년까지 활용 법제화,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“만18세”로 규정, 육아휴직 급여 상한성 확대 |
|  |  | 미래산업 분야 투자 확대 |  |
|  |  |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|  |
|  |  |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|  |
| 정통시장 및 지역 경제 |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,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, 전통시장 기반 청년몰 대폭 확대 및 남대문, 동개문 시장 등 ‘사후면세점’ 지역으로 정착 |  | 대형사업자의 골목장권 진입을 규제 및 조정, |
|  |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,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 확대, 대학발 기술창업 유도,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, 벤처기업 적극 육성 |  |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, 창업 관련 규제 완화, 창업이 성공한 경우 상장 및 인수합병 여건 개선,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에 소득공제 확대, 실패할 경우 세금환급 |
| 김영란법 | 깅영란법 10.10.5로 조정, 농축수 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| 김영란법 완화 |  |
|  |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모든 규제 철폐 |  |  |
|  |  |  |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‘집단소송제도’, ‘징벌적 손해배상제도’ 도입 |
|  |  |  |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을 15년으로 연장,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 |

**교육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홍준표 | 심상정 | 유승민 |
| 어린이집 |  |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, 병설유지원 확대,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,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| 22년까지 국공립, 법인,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70%로 대폭 확대 |
| 초중고 |  |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 전환, 일반고 무학년제(선택과목 중심), 학교 간 상호 청강 시스템 도입, 국제중 일반중학교로,  자사고, 외고,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, 국정교과서 폐지 | 초등~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, 하교시간 오후 4시로 단일화, 7시30분까지 방과후교실 등 활성화, 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, 정착되면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,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, 개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 |
| 직업계 및 예체능 초중고 |  | 직업계고 지원금 확대,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,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|  |
| 수능 및 내신 |  | 수능 절대평가와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|  |
|  |  |  |  |
| 초중고 복지 | 초중고생 학습교재 구입용 복지카드 지급 | 고등학교 무상교육,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| 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| 대학 | 대입 성적 우수자에 입학, 등록금 지원,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,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, 대학 졸업유예비 없애기 |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, 사립대는 반값등록금 실현 | 창업 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,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, 면접, 수능으로 단순화, 논술 폐지 |
|  | 사법고시 존치 |  |  |

**복지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홍준표 | 심상정 | 유승민 |
|  | 소득 하위 50% 이하 가구 초중고생 월 15만원씩 지급, |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|  |
|  |  | 장애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,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|  |
|  |  |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|  |
| 주택 관련 |  | 연간 15만호 이상 <반값임태주택> 공급,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%로 확대,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확대, | 22년까지 15만호의 청년층 주택 공급,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% 이상을 1-2인 가구에 우선 공급, 1-2인 가구가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면제, 소형주택 분양 1-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|
|  |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2배 이상 |  |  |
|  |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특별대책 마련, 소득 하위 20%에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마련,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|  |  |
|  |  |  |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,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, 건강보험 ‘본인부담률’ 낮추기 |

**사회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홍준표 | 심상정 | 유승민 |
| 범죄 |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, 흉악범죄자 보후수용 제도 도입 | 데이트폭력, 스토킹범죄,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3대 폭력 대응 강화 |  |
| 성형 |  | 미용 성형 산업 규제 |  |
| 낙태 |  | 형법상 낙태죄 폐지, 임신중절 허용 |  |
|  |  |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|  |
| 교통 |  | 수서발 한국고속철도노선과 코레일 재통합 등 철도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,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|  |
| 의료 |  | 건강보험 보장성 80%, 중위소득 50%까지 의료급여 확대, 보건의료인력 확대, 만성질환관리 강화,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해결, 0~15세 어린이 병원비 100% 국가 책임 |  |
| 노후 |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, 재취업 교육 강화, 자영업 지원 강화,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, 독거노인 보호 확대,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톰 서비스 지원 |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,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%로 인상, 반값장례비 실현 |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, 독거노인 보호 확대, |
|  |  | 데이터 2기가 음성, 문자 무제한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|  |
| 환경 |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및 식수 전용댐 건설 | 2040년 원전 제로 실현,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 |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.  원전 내진설계 강화, 비상대피계획 수립, 원전밀집지역의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, 전기에너지는 가스발전 등으로 대체 |
| 미세먼지 |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,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대응, 공기정청지 설치 추진, 석탄발전소 배출 기준 대폭 강화, 22년까지 35%를 친환경차로 대체 |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 | 측정소 확대,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,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,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추진,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, 중국과 협약체제를 강화하고 한중일 공동저감 투자 추진 |
| 동물 |  | 헌법에 동물권 명기,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,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기준 강화, 동물보호군 설치 |  |
|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|  |  | 대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분할하여 공급, 임대시 주변 80% 시세에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|

**정치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홍준표 | 심상정 | 유승민 |
| 검찰 |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, 상호 감시 |  | 기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3의 조직에게 부여 |
| 경찰 | 경찰대학을 제작자에게 개방, 자치경찰제 도입 |  |  |
|  | 감찰대상 확대, 감찰 독립성 강화 |  |  |
| 대통령제 |  |  | 대통령 4년 중임제, 지방분권형 개헌 |
|  |  |  |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‘공직자비리수사처’ 설치 |